감사원, '연합군' 구성 4대강 본격 감사 착수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도 국민 공익감사 청구

민주당·정의당 "정책감사 보복 아니다 … 조속 이뤄져야"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 관련 감사에 대한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4일 "청와대 발표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 감사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사원이 감사를 망설이거나, 연내 착수가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 작업은 주무 부서인 제1사무차장 산하 국토해양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추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한 이후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와함께 이날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가 마무리되면 청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체적인 감사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주무 부서인 국토해양국, SOC·시설안전감사단, 전략감사단, 지방행정감사국, 그리고 과거 감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감사관 등이 참여하는 '연합군'의 형태로 감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정책감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정책감사 지시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책감사는 정치보복이 아닌 자연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혈세 22조원을 투입했고 매년 이자비용 3400억원을 2036년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녹조라떼'라는 말이 나오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4대강 문제를 덮자는 것은 산과 강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전 정부가 3차례 감사를 했지만, 2차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시정은 커녕 기업 담합행위를 부분적으로 밝혔을 뿐이다. 이번 정책감사가 4대강 사업 관련한 논란을 종식하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감사 지시에 감사원이 미적거리는 태도다. 절차상 국무총리의 요구나 관계 장관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적폐세력에 영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제대로 된 4대강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연합뉴스

함평 나비, 봉화마을서 훨훨 날아 올랐다

노무현 추도식서 1004마리

2010년에도 523마리 보내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제8주기 추도식 때 눈길을 끈 '1004마리 나비 날리기' 행사에 쓰인 나비가 함평에서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노 전 대통령과 함평 나비와 인연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제8주기 추도식 때 문재인 대통령과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이 노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날린 1004마리 나비는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수됐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5월 나비축제를 위해 나비를 기르고 있다.

함평군은 2010년 노 전 대통령 1주기 추도식 때도 나비 523마리를 봉하마을로 보내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도 함평군과 인연이 각별했다. 2004년엔 함평 나비 축제가 농촌형 지역발전 우수사례로 뽑혀 청와대에서 힘찬 날갯짓을 했다. 이런 인연으로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월 폭설 피해를 본 함평군을 찾아 복구 현장을 둘러봤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첫 타지 나들이' 장소로 함평을 택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당시 함평군 엑스포 공원을 방문해 "아름다운 창조의 현장입니다"라고 방명록에 쓴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함평 나비'에 감흥을 받아 3개월 후인 7월 봉하마을 주민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함평을 다시 찾았다. 당시 봉하마을과 함평 신광면 연천마을이 자매결연했고, 함평군은 봉하마을에 700평 규모의 연꽃단지를 조성해줬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영산강 수질오염 공동조사

道보건환경연·道산업진흥원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과 영산강수계에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 원인 추적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는 '영산강수계 주요 산단 유해물질 발생 및 폐수성상 현황 조사'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환경기초조사사업의 협업행정 일환으로 추진된다. 24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영산강수계에서 수질오염사고는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남산단의 시안화칼륨 유출과 세제제조업체의 섬유유연제 하천 유출, 최근 하남3교 부근의 유류 유입 등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방제작업과 오염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영산강수계 하남산단과 첨단산단 소재 업체의 폐수 배출수와 공단 배수로 및 영산강 본류의 수질과 퇴적물을 집중 조사해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chadol@

트럼프, 교황 만나다 24일 바티칸에서 개인접견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숲 '매우 건강' 1등급 비중 9~10%

산림청 산림 건강·활력도 조사

전남 산림의 매우 건강한 1등급 비중이 9~10%로, 충남, 강원과 함께 가장 높았다. 매우 쇠약한 5등급이 1% 이하로 종합적 산림 건강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4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산림 총 1000개의 고정 조사표본점을 대상으로 했으며 평가 항목은 수관활력도,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토양산도, 유기물함량, 유효토심 등 7개다.

연구 결과 우리 산림의 81.3%는 건강했으며 건강성이 다소 떨어지는 산림은 17.2%, 쇠약한 산림은 1.5%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 결과를 보면 나무들의 건강 상태인 수관활력도의 경우 건강한 등급이 89.9%로 나타났고 쇠약한 등급이 0.6%로 분석됐다. 종다양성 지수는 4.83, 최대 종다양성 지수는 6.88, 균재성 지수는 0.70로 분석되어 종합적인 종다양성 지수는 평균 이상으로 진단됐으며 토양 양분 상태는 적정범위를 나타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자동차 규제, 전남 탄소배출권 활성화로 미세먼지 줄여야"

광주전남연구원 분석

광주·전남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규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전남연구원의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인포그래픽스 제1호 미세먼지'에 따르면 광주의 미세먼지의 47.0%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도로이용오염원, 36.5%는 철도, 항공 등 비도로이용오염원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가지 내 2부제 실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자동차 규제를 통해 미세먼지 수치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43㎍/㎥로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38㎍/㎥)에 이어 두 번째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의 분석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지난 8일 236㎍/㎥을 정점으로 7일 165㎍/㎥, 6일 153㎍/㎥로 매우 나쁨(201~300 이상), 나쁨(121~200)이 3차례, 약간 나쁨(81~120)이 4월 30일(86㎍/㎥), 5월 1일(83㎍/㎥) 2차례 등 모두 5차례나 광주 전체가 미세먼지로 뒤덮였다. WHO의 권고 기준인 50㎍/㎥ 이상인 날은 11일이나 되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8일 미세먼지 수치는 지난 한 달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시의 경우 자동차 규제, 철도 및 항공 등의 운행 조정 등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2015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지만, 지난 한 달간을 살펴보면 50㎍/㎥ 이상 대기먼지가 발생한 날은 6차례나 됐다. 지난 6일과 7일 각각 151㎍/㎥, 164㎍/㎥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8일에는 189㎍/㎥로, 서울(174㎍/㎥)보다 공기 질이 더 나빴다.

전남의 미세먼지는 제조업 연소·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양이 84.5%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전남도의 기반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의 공장에서 뿜어내는 먼지가 전남의 대기를 뒤덮고 있다는 의미다.

전남은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기존 기반산업의 대기먼지를 최소화하면서 향후 바이오·에너지 등 오염원이 적은 산업으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국내선 항공기 초과 예약땐 직원부터 내린다

탑승때 반드시 신분증 제시

최근 국제적 논란이 된 유나이티드항공 사건처럼 국내선 항공기에서 오버부킹(초과판매)으로 좌석이 부족할 때는 앞으로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한다.

또 항공권 발권 후 탑승시점 이전에 무료 수하물 규정 등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됐다 해도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장애인 승객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사가 휠체어 등 편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7개 국적 항공사의 국내항공 운송약관을 6월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버부킹은 최대한 많은 좌석을 팔아야 하는 항공사가 승객의 뒤늦은 취소와 예약부도(노 쇼, no show)로 인한 좌석 손실을 막기 위해 좌석 수보다 표를 더 많이 팔아 발생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오버부킹 피해사건은 국적 항공사와 외항사를 합해 2015년 3건, 2016년 2건, 올해 1분기 4건이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도 승객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